여권 지도체제 지각변동 오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내각 인사 등
서거정국 이후 역학구도 변화 예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정국이 끝나자마자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이 이어지고 한나라당 지도체제에도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역학구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은 개각과 여당의 지도체제 개편은 그동안 대치 국면을 반복해왔던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DJ 서거 정국 기간 동안 미뤄왔던 참모진과 내각 개편 카드에 대한 최종 점검에 들어간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개각 등 인적쇄신의 내용에 따라 이명박 정부 집권 2기의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선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금주 후반 청와대 개편, 내주 중반 개각' 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개각과 관련해선 총리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충청총리론'이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DJ의 화합 및 통합 유지에 따라 '호남총리론'이 급부상하면서 총리 인선은 다시 고민 모드로 진입한 상황이다.

충청 총리로는 그간 이완구 충남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이원종 전 충북지사,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호남 총리로는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거명되고 있으나 고령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적 고려를 벗어난 참신하고 실용적 이미지의 인사가 총리로 깜짝 기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박(친박근혜)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의 입각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 당내에선 친박인 서병수, 최경환, 진 영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원희룡, 주호영, 나경원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정치권 인사의 중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그동안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유지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여권 전반의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공천을 전제로 내달 10일 전후로 대표직을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지도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박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경남 양산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다면 지난해 전당대회 득표율 2위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할 전망이다. 박 대표의 사퇴로 한 자리가 비게 되는 최고위원에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성도 있지만 친박 진영의 견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론도 거론되지만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다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표의 공천에 대해 친이 주류 강경파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몽준·앞줄 왼쪽) 소속 국회의원들이 24일 오전 낙동강 살리기 선도지구인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박광태 시장 'DJ애도' 광주시민에 감사

○…박광태 광주시장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눈물로 애도하고 배웅해주신 광주시민에게 유족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기간 상주로서 옛 전남도청 분향소를 지킨 박 시장은 이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비록 김 전 대통령의 육신은 가셨지만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치신 숭고한 뜻이 찬란한 희망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광주를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김 전 대통령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남기신 화해와 용서, 평화와 이웃사랑의 정신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음해 강력 대처 하겠다"

○…최근 경찰 등의 수사로 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음해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황 청장은

이날 구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남구 행정 음해세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토착·기득권 세력이 음해와 모략을 통해 구정 수행을 어렵게 하는 작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율성 국제음악제 개최 예산 불법 사용 여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전 주민자치위원장의 인사청탁 관련 검·경의 수사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음해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SSM·골목상권 상생법안 만든다

광주시의회 조례안 추진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들 간 골목상권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이들의 상생 협력과 균형 발전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유재신 의원(민주·광산3)의 대표 발의로 '광주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안'이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제182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하게 된다.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유통업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 공무원과 시의원,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상인·재래시장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재고 토지 해소…수익 기반사업 총력"

신임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수익성을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김주열(55) 신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4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전남의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인 임무를 달성하고 수익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당분간은 재고토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특히 남악신도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여수시 경도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초기투자비를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개발공사의 내부개혁방안과 관련 "임직원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사장은 "직원 인사에 능력과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강진출신으로 조선대 토목과와 연세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DJ 국장 '남북화해 무대'
美 CSM 보도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펼쳤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남북화해의 새 장을 열고 있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23(현지시간)일 보도했다.

이 신문 인터넷판은 이날 국회 앞에서 치러진 김 전 대통령의 국장에 수만명이 몰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낸 조문단 6명을 접견했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조문단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남북협력의 진전'을 위한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고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초청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화해와 통합' DJ 뜻 받들자

한나라, 야권에 당대표 회담 또 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가 끝난 24일 한나라당은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담을 또다시 제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속되던 조문정국은 끝났다"면서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또 "이제는 민생 정국으로 전환돼야 하며, 이 시점에서 여야 대표 회담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의했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 전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측에는 제가 직접 얘기도 한번 해봤다"면서 "서로 만나서 한번 풀어보자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권의 임무가 아니겠느냐고 했으나 아직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거절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며 "돌아가신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회담에 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교섭단체대표인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를 오늘 오전에 찾아가 정식으로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 등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국회만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표회담의 전제는 한나라당이 야기한 갈등 해결"이라며 "미디어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